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5. MAY

전문가 기고

美 한국천일염 인도보류명령이
던진 질문: 우리는 강제노동과
얼마나 멀리 있나?

ESG 주요 현안

미국 청정경쟁법(C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美 한국천일염 인도
보류명령이 던진 질문:

우리는 강제
노동과 얼마나
멀리 있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실제 현장에서
무심코 행해진
행동이나
관행 속에서도
강제노동의 요소가
숨어있을 수 있다.”



국내 최대 단일염전 제품, 장애인 강제노동 혐의로 미국에서 수입 억류

2025년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전라남도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했다. 이는 미국 관세법 제 307조에 따라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신안 지역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2014년과 2021년, 동일 지역에서 장애인 노동 착취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일부 가해자는 처벌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인권단체의 청원과 CBP의 2년 5개월여 조사 끝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 첫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 국내 강제노동 잠재적 위험 증가

태평염전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서 농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화된 영세한 산업에서 또다른 취약층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며 강제노동의 위험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56만 1천 명에 달하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69%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 투입되며,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아 노동조건, 안전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

강제노동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흔히 물리적 폭력이나, 감금, 강도 높은 착취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 무심코 행해진 행동이나 관행 속에서도 강제노동의 요소가 숨어있을 수 있다.

ILO 협약 제29호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된 노동이나 서비스로서,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노동을 의미한다. ‘비자발성’과 ‘처벌의 위협’이 강제노동의 핵심요건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ILO는 강제노동의 지표로 다음의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ILO의 강제노동 11가지 지표



전문가 기고

美 한국천일염 인도
보류명령이 던진 질문:

우리는 강제
노동과 얼마나
멀리 있나?

ILO의 정의에 따르면, 과밀하거나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숙소, 기숙사 등의 통금시간 설정, 임금체불 등 일선현장에서 다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모두 강제노동의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의 조건 등에 대해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강제노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불법파견 구조와 강제노동 연계 가능성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의 화재로 23명이 사망했고, 희생자 중 18명이 외국 국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 전원이 인력업체를 통해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외국인 대다수가 한국어가 미흡한 가운데 안전교육이나 비상상황에 대한 대피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고용 관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역·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이 만연하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다음과 같은 강제노동 지표와 연계될 위험을 높이고 있다.

ILO의 강제노동 11가지 지표

위험 요소	ILO 강제노동 지표	설명
책임 주체의 모호화	협박·위협 / 구제 불가능성	원청과 하청 간 책임 회피로 권리구제 경로 차단
사회보장 배제	취약성의 남용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등 제도 밖 노동에 노출
정보 접근권 제한	기만 / 자유롭지 않은 동의	고용형태, 임금,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 비공개 또는 허위정보 또는 불충분 정보제공
부채 증속	채무 속박	수수료, 선금금 등으로 이동의 자유 제한
안전관리 부실	열악한 근로·생활환경	형식적인 안전 교육, 안전장비 미지급 등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추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326만 명, 2050년에는 2,421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젊고 역동적인 인력은 수도권의 특정 산업군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 기고

美 한국천일염 인도
보류명령이 던진 질문:

우리는 강제 노동과 얼마나 멀리 있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국내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가 불가피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인력이 아닌 주요한 국내 생산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편법적인 외국인 인력 파견 구조를 근절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정비와 실천이 시급하다. 사업장 배치 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노동법, 근로문화,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적응력을 높이고, 사업장 내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높은 신고 및 상담 채널을 강화 운영하며 전문 컨설팅 및 노무 지원 체계를 공공 차원에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무단이탈, 불성실 근무 등으로 사업장의 생산성 저하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인력 충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고용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노동 환경의 조성은 강제노동의 방지는 물론이며,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청정 경쟁법(C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과 미국 주정부 차원의 환경규제 속에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다층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서론

미국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은 2019년 유럽그린딜 발표 이후 추진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탄소규제가 무역과 산업경쟁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CCA는 세계최대 강국인 미국도에 대응하여 2022년 6월 민주당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이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고, 글로벌 탄소중립(Net Zero)정책을 동시 달성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발의 당시 미국 제조업은 탄소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아부어 탄소집약도를 전세계 평균 50% 미만으로 낮췄지만, 중국은 3배, 인도는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탄소집약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탄소집약도는 온실가스배출량을 GDP(국내총생산량)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이에 미 상원은 국가별 탄소집약도 차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만큼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2~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되었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실제 입법 및 시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이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 미국 청정경쟁법(CCA)의 주요내용

CCA 적용대상은 초기에 에너지 다소비 원자재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비료, 수소, 아디픽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펄프, 종이, 에탄올 등 기본재가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원자재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세금을 부과하고, 2027년부터는 완제품(자동차,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세기준은 국가별 탄소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GDP)차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 예시: 한국(0.14)과 미국(0.11)의 격차(0.03) X 55달러 X 수출량
→ 100톤 수출시 5,500달러 부담

수출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사용량 등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CCA는 이미 탄소비용을 미국 이외에서 지불한 경우에는 이중부담방지 원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탄소클럽(Carbon Clubs)조항은 미국과 유사한 탄소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최빈개도국의 발전권리를 고려해 UN선정 저개발국(LDC)에서 오는 수입품에는 CCA 부담금을 면제, 유예 또는 완화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CCA와 EU CBAM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CA와 CBAM은 탄소규제라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나, 과세기준, 탄소가격 측정,적용품목 등에서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청정 경쟁법(C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국 CCA vs EU CBAM과의 비교

구분	미국 CCA	EU CBAM
과세기준	국가별 평균탄소집약도	제품별 실제배출량
탄소가격	55달러/톤(연간5%인상)	EU배출권거래제(ETS)가격변동
과세기준	원자재 → 완제품 단계적확대	원자재 중심, 전품목 확대예정

3.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CCA동향

3.1 정책 환경 변화: 기후정책의 급격한 후퇴와 보호무역 강화

2025년 1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재취임 직후 제일 먼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재차 선언하고,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화석연료 산업지원 확대 등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을 전면 부정, 전환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희생시킨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반영한 조치로, 연방차원의 기후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이 연이어 발동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의 독자적 기후행보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 4월 캘리포니아, 뉴욕, 버몬트 등 주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기후배상금(Climate Super fund)법안 등을 “미국 에너지 패권을 위협하는 위험적 규제”로 규정하고, 법무부를 통해 이의 집행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석탄 원유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환경보호청(EPA) 예산 55% 삭감을 추진하며 기후 연구 및 환경정의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CCA의 입법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CCA가 추진되려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글로벌 기후 협력이 필수적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를 강화하며 무역 보호주의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2 CCA시행 전망: 입법 동력 상실과 관세정책으로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CCA를 “미국 산업 경쟁력 해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CCA법안 추진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CCA는 의회 심의 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에너지 주권강화’를 명분으로 화석연료 산업보호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CCA 대신 전면적 관세강화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EU등 57개국에 대해 최대 54%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적자 해소”를 명목으로 보호무역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청정 경쟁법(C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3.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 완화 vs 중장기 리스크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향후 CCA 시행지연으로 철강, 화학 등 탄소 고배출 산업의 탄소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5~2034년 추정되었던 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장벽은 증대할 것입니다. 대미 수출품(자동차 28%, 전자제품 19%)에 10%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약 7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확대관세 적용시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글로벌 규제는 분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중국 등은 탄소세 성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관세 중심으로 전환하며 이중 규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EU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EU CBAM부담금과 미국 관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후정책 후퇴에도 불구하고 Cap-and-Trade, 기후소송 등을 강화하며, 현지 진출 기업에 저탄소기술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과 미국 주정부 차원의 환경규제 속에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다층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탄소 고배출 산업인 철강과 화학 분야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거점을 확대하거나,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 제 3국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CBAM 등 타국의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등 첨단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CBAM 등 타국의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등 첨단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혁신과 생산 공정의 고도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EU시장을 겨냥해 제품의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표준(GRI, SASB)에 부합하는 ESG(환경,사회,지배 구조)보고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내 로비활동을 강화하여 관세 면제나 완화조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주 정부와 탄소중립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확보함으로써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선점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SG경영을 내재화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CDP평가등급 상향을 목표로 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와 시



ESG 주요 현안

미국 청정 경쟁법(C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망 내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탄소 감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체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K-ETS)를 미국청정경쟁법(CCA)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탄소 가격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처럼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라는 이중 리스크 속에서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 기술혁신, 정책 리스크 관리, ESG경영 고도화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참고문헌

1. PwC 2025.2월 보고서
2. KOSIF 칼럼(25.01.14,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3. 미국청정경쟁법CCA의 국내 파급효과 및 시사점(한국경제인협회, 24.10.30)
4. Impacton.net(미청정경쟁법, 2024.10.31)
5. 연합뉴스 (미청정경쟁법, 2024.10.28)
6. 트럼프2기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가능성과 과제(현대경제연구원, 25.3.12)
7.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에너지 기후정책과 대내외 동향(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25.3.4)

E

환경



美 연방정부, 화석연료 승인 절차 대폭 단축...청정에너지는 배제

임팩트온 | 2025.04.27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97>

그린워싱 제재 본격화...“규제보다 예방이 중요”

한경ESG | 2025.05.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26196i>

티머니, 올해도 초등학교 ‘교실 숲’ 조성...ESG 경영 확대

한경ESG | 2025.05.2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65770i>

OCI, LG엔솔과 ‘에너지 동맹’ ...복미 ESS 사업 영토 넓힌다

한경ESG | 2025.05.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9278i>

유럽은행감독청, 중소기업 ESG 공시 규정 간소화 추진

임팩트온 | 2025.05.27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245>

WMO, 향후 5년내 지구온도 ‘한계치’ 2도 이상 가능성 최초 제시

ESG경제 | 2025.05.29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8>

작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95%...올해 87% 예상

이투데이 | 2025.05.29 <https://www.etoday.co.kr/news/view/2474655>

226개 기초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첫 수립

연합뉴스 | 2025.05.29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9095200530?input=1195m>

GS더프레시, 발달장애 청년 손길 담긴 토마토 200톤 판매 돌파

중앙이코노미뉴스 | 2025.04.21 <https://www.joong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68>

해남서 국내 최초 ‘ESG 페스티벌’ 개최...지역 ESG 확산 이정표

ESG경제 | 2025.04.2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3>

산림복원을 통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이행 강화

임팩트온 | 2025.04.2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27>

트럼프 정부 ‘DEI’ 폐기 맞춰...글로벌 기업들 여성할당제 폐지 움직임

한겨레 | 2025.05.1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96827.html

MZ세대 70%,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를 취업 중요기준으로 고려

ESG경제 | 2025.05.20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6>

금융위 “EU 등 규제 완화... 주변국 동향 반영해 ESG 공시 기준 결정”

시장경제 | 2025.04.23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53>

15개국 기업 경영인 78%, 재생에너지 전환 지지

환경일보 | 2025.4.28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003>

트럼프발 ‘안티 ESG’ 불뚱... 투자자들 ‘ESG펀드 엑소더스’

국민일보 | 2025.04.3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5910976&code=11151300&cp=nv>

현대차·기아·모비스,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 “경영 투명성 제고”

뉴데일리 경제 | 2025.04.2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27/2025042700017.html>

“공급망 위기 심화...기업의 윤리경영, 선택 아닌 필수”

이데일리 | 2025.05.1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27/2025042700017.html>

삼성, 중국 내 외국계 기업 중 ESG 1위... 애플 7위

파이낸셜뉴스 | 2025.05.16 <https://www.fnnews.com/news/202405161829368262>

S

사회



G

지배구조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292	300	303	301	299	296	290	290
사회적채권	1,659	1,689	1,696	1,701	1,708	1,713	1,718	1,718
지속가능채권	258	262	254	255	249	248	243	245

(단위 : 천억 원)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268	274	273	273	269	263	260	256
사회적채권	2,153	2,165	2,172	2,162	2,152	2,130	2,120	2,109
지속가능채권	166	168	166	167	165	163	164	164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4.30)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4	20	38	78	131	161	204	0

(단위: 건)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4.30)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배구조보고서	101	213	224	231	355	380	530	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4)* CF100 참여 기업 수:
171개 ('25.4)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	-	-	6	14	27	36	36	36
글로벌	141	204	269	335	393	426	439	446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